



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CEP는 이런 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급식비 상환은 "확인된 학생 인구 (Identified student population)"를 1.6로 곱하여 계산한다. 그 이유는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할인 된 급식이나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모두 포함시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 곱하는 수의 역할은 빠진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인 것이다. 곱하는 수 1.6을 지지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학생의 40 퍼센트가 정해진 것처럼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큰 곱하는 수를 정함으로써, 연방 납세자들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CEP 정책은 저소득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고소득 학교들조차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이 학교와 확인된 학생 인구가 높은 다른 학교나 학군을 집합시킴으로써 저소득 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회 법안은 이런 CEP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의 40퍼센트 한계선을 60 퍼센트로 올릴 것이며 이는 지금보다 더 적은 중산층과 부유층 집안들이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학교-대-학교가 아닌 학교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 학교들이 중산층과 부유층 학생들이 다니는 고소득 지역 학교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법안은 1.6라는 곱하는 수 역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CEP는 통틀어 다 제거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위해 지원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복지 혜택이 필요치 않을 곳으로 간다면 이는 납세자들의 혈세를 잘못 관리 하고 있다는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연방정부가 소득의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퍼준다 해도 그것이 낭비이자 남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 <http://dailysignal.com/2016/05/17/school-lunch-program-no-wealthy-child-left-behind/>